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 구현을 위한
해양경찰 실천계획**

2011. 12.

해양경찰청

||| 목 차 |||

I. 지난 4년간의 주요 성과와 반성	1
II. 중점과제 실천계획	5
1. 전략적 해양경비체계 확립으로 해양주권 수호 ...	6
2.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해양안전관리체계 구축 ...	10
3. 법질서가 확립된 평온한 해양치안질서 유지 ...	14
4. 국가 방제시스템 정착으로 깨끗한 바다 보전 ...	18
5. 소통과 참여를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	22
〈별첨 1〉 주요과제 추진일정	26
〈별첨 2〉 2011년 업무계획 이행실적	28

I. 지난 4년간의 주요 성과와 반성

가. 주요 성과

① 관할해역 완벽한 경비임무 수행으로 해양주권 수호

- 독도·이어도해역 우발사태 등 경계 미확정 해역 분쟁상황에 대비 국가위기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해상경비세력 보강
 - * 독도 경비세력 증강('07년 4척 → '12년 6척), 대형함정 1척 이어도 전담배치
 - * '07년 대형함정 23척, 항공기 15대 → '11년 대형함정 30척, 항공기 22대

②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강화로 배타적경제수역 어업자원 보호

- 안전한 단속활동 보장 및 엄정한 해상 법집행을 위한 대책 추진
 - * '08년 해상특수기동대 창설, '11년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강화 T/F 운영
- 불법조업 외국어선 강력 단속으로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
 - * 불법 외국어선 단속('08 ~ '11.11월) : 총 1,622척 검거, 담보금 약 310억원 부과

③ 접적해역 안보 위기상황 적극 대응 및 해양테러 'ZERO' 달성

- 동·서해 접적해역 효율적 위기대응체계 구축으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시 신속한 인명구조 및 해상치안질서 유지
 - * 천안함 승조원(55명) 구조, 연평도 출도민 안전확보 및 北 상선 우리해역 운항금지
- 해양 대테러·PSI 수행 역량 강화 및 대규모 국제회의 성공적 경호
 - * '0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공적 경호

④ 안전한 바다생활을 위한 선진형 해양안전망 구축

- 해양사고 대응시간 단축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 해양사고 대응 시간 및 구조율 : '07년 28분, 96.4% → '11.11월 12.5분, 99.3%

- 다중이용선박의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 연안 교통관제시스템 인수('10. 7월) 이후 무사고 성과 달성 등 해상교통질서 확립
-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관리 주도기관으로서의 종합안전 서비스 제공
 - * 물놀이 사망자수 감소 : '08년 18명 → '09년 9명 → '10년 7명 → '11년 4명

5 권력·토착비리 지속 단속으로 공정사회 구현 및 사회안정 도모

- 공무원, 기관·단체 및 해양·수산사업 등에 대한 기획수사 강화
 - * 특별단속실적('09년 ~ '11년) : 501건 1,873명 검거(구속 61명)

단속 유형별	검 거		처 리	
	건수(건)	인원(명)	구속(명)	불구속(명)
국고보조금 등 해수산업 비리	303	1,079	41	1,038
금품수수부정대출 등 비리	16	82	1	81
각종 공사관련 불량자재 납품 등 비리	8	31	0	31
기타 토착비리 등	174	681	19	662

- 합법집회 보장, 불법행동 엄정대응 등 해상집단행동 체계적 관리
 - * '08 ~ '11년간 해상관련 주요 집단행동은 새만금 간척사업을 비롯,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등 총 24회 1,660척(2,925명) 발생, 불법행위자 75명 불구속 입건

6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역량 제고 등 방제총괄기관 기반 구축

- ‘허베이 스피리트호’ 오염사고('07.12월)시 도출된 문제점 개선 및 국가방제능력을 ‘해상 기름회수 목표량’ 개념으로 재정립
 - * 국가긴급방제계획 전면 개정('09. 4월), ‘해양환경관리법’ 정비('11. 6월)
- 과학적인 해안방제를 위한 신기술 도입 및 전산 시스템 개발
 - * 해안오염평가팀 구성·운영, 해안방제지원시스템 구축, 방제 대비·대응 태세 점검
- 다양한 방제정 건조, 방제비축기지 신축 등 국가 방제역량 제고를 위한 방제장비·자재 보강
 - * 150톤급 방제정 3척 건조, 10톤 소형 방제작업선 10척 확보
 - * 재난적 오염사고 사고초기 7일간 사용할 방제자재 비축(광양·대산·울산)

⑦ 親서민, 녹색성장 등 국정철학 구현과 성과관리 우수기관 도약

- 공정사회 추진을 위한 「유비쿼터스형 바다안전망」 구축(4대분야 12개 과제) 및 녹색 해양경찰 실현을 위한 「그린오션 프로젝트」 추진(청정기술 도입, 환경보존, 친환경 업무개선 등 3대분야 9개 과제)
 - * '08년 대비 종이문서 줄이기 80% 절감 및 전기·수도 등 에너지 26% 절감
- 참여형 성과평가제도 마련 및 성과관리 우수기관 위상 확보
 - * 행안부 주관 성과관리 최우수('10년), 총리실 주관 특정평가 최우수('10년)

⑧ 미래 선진 해상치안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한 교두보 마련

- 해양경비업무에 대한 미흡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해양경찰업무 수행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해양경비법」 제정 추진
 - * 해양경비활동, 무기 및 장비 사용 등 총 5장 22개 조문
- 서귀포('08. 8월)·평택('11. 4월) 해경서 신설, 제주지방청 신설('12년 상반기 예정) 등 균형있는 지방조직체계 구축
- 세계일류 해양경찰로 도약하기 위한 『해양경찰 비전 2020』 수립·시행
 - * 2020년까지의 중·장기 추진과제 6개 분야 16개 선정
- 자체 인사법령 제정으로 독자적인 정책추진 여건 마련과 총경 승진 대상자 역량평가 실시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도입
 -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110호) 제정

⑨ TV 등 방송미디어 활용 해양안전 정책 적극 홍보

- 인기 교양·예능 프로를 통한 기획홍보를 실시하여 해수욕장 안전 관리, 해양긴급번호 122 등 정책홍보 활성화
- 특히, 최초 해양경찰 드라마 「포세이돈」, TV공익광고 방영 등 해양경찰의 역할 및 정책에 대한 對국민 인식 재정립 계기 마련
 - * MBC 무한도전, KBS 체험! 삶의 현장 등 지난 4년간 총 102회 기획방송 추진

나. 평가와 반성(미진한 점)

① 해양경비 분야

- 외국어선 불법조업이 강력 단속에도 불구하고 폭력 및 집단저항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현장단속만으로는 불법조업 해결에 한계
⇒ 국내 단속 관련 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 외교적 해결방안 마련과 중국어선 성어기 효과적 단속을 위한 경비세력 증강 투입 필요
- 불법 외국어선 사법처리시 외교문제를 고려한 대응전략 마련

② 해양안전 분야

- 해수욕장 안전관리 취약 시간 및 지역에 대한 대응체계 미흡
⇒ 해수욕장 개장시간 전후 및 안전요원 비상주 지역 안전관리 강화
- 경인 아라뱃길 개통에 따른 관계기관간 관리협력체계 강화 필요

③ 해양치안 분야

- 수산시설물 설치, 어선감척 등 국고보조금 부정집행에 수사 편중
⇒ 수사·정보경찰을 망라하여 산업기술 유출, 조선·해운업체 비리 등 해양산업범죄 및 기업형 비리 등에 대한 수사영역 확대 필요

④ 해양오염방제 분야

- 폐기물 해양투기량 감축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폐기물의 육상 적체 및 배출업체 파업으로 국민 불편 초래
⇒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 육상처리시설 조기 확충 추진 필요
- 인접국가간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정보공유 강화 필요

Ⅱ. 중점과제 실천계획

미션
비전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 구현
“세계일류 해양한국의 든든한 동반자”

핵심
목표

공정하고 믿음직한 선진 해양경찰

중점
추진
과제

- ◆ 전략적 해양경비체계 확립으로 해양주권 수호
-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해양안전관리체계 구축
- ◆ 법질서가 확립된 평온한 해양치안질서 유지
- ◆ 국가 방제시스템 정착으로 깨끗한 바다 보전
- ◆ 소통과 참여를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핵심
과제

- | | |
|--------------------------|-------------------------|
| 외국어선 불법조업 강력 대응체계 구축 |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광역경비체계 정착 |
| 해양안보역량 강화 등 위기관리 능력 제고 | 수색구조역량 강화로 해양사고 대응체계 개선 |
| 체계적 해상교통관리로 안전한 바닷길 확보 | 수상레저 및 해수욕장 안전관리체계 정립 |
| 공정 사회 실현에 수사역량 집중 | 인권 보호와 수사의 공정성 제고 |
| 갈등 해소를 위한 민생정보활동 주력 | 외사범죄 대응력 제고와 국제공조체계 강화 |
| 국가방제시스템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 해양오염사고 신속 대응태세 유지 |
| 위험 유해물질 및 폐기물 해양배출 관리 강화 |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환경 보호 |
| 미래를 준비하는 선진 조직문화 창출 | 참여와 공감의 인사행정 실현 |
| 장비관리의 탄력적 대응체계 마련 |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

1

전략적 해양경비체계 확립으로 해양주권 수호

가. 외국어선 불법조업 강력 대응체계 구축

(1) 해상 공권력 강화로 외국어선의 불법의지 무력화

① 서·남해 외국어선 ‘감시 및 단속 세력·인력 보강’ 추진

- 대형함정 9척 연차별 증강, 1일 9척 경비체계 확립(현재 1일 6척)
 - * 신조 5,000톤 급은 해상감시 거점 및 단속함정 모함으로 활용토록 설계
- 작전능력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소형 고속단정 성능 개선
 - * 고속단정(18대)을 10m급으로 교체 및 신조 대형함정에 1척당 4대 장착 추진
- 해상특수기동대원 나포작전 수행능력 제고 및 사기 진작책 마련
 - * 기동대원을 특수부대 출신으로 단계적 대체 및 특별수당 신설

② 불법조업 중국어선 검거시 안전한 단속작전에 필요한 장비 보강

- 휴대용 유탄발사기, 섬광폭음탄, 그물총 등 비살상용 진압장비 확충
- 개인 안전장비(방검부력조끼, 안전헬멧, 안전화, 해상진압복 등) 개선 지급
 - * ‘방검부력조끼’ 취약부분 특수재질 보강하고 활동성 강화 등 장비 경량화
- 채증통신장비(원거리 고성능 채증카메라, TRS 통신기지국, 헤드셋 등) 보강

③ 저항의지 봉쇄를 위한 대응전술 및 사법처리 지속 개선·보완

- 과격해지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해상 총기 사용 단계별 가이드라인’ 작성 등 신규 전술 개발
 - * 정당한 공무집행에 불응하고 폭력저항시 초기단계부터 총기 사용 대응
- 집단계류, 흥기사용 등 폭력·저항행위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극 적용하고, 불법 어획물에 대한 필요적 압수를 위한 협의 추진

[2] 외국어선 불법조업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역할 강화

- 불법조업 외국어선 소속국 관계기관에 실효적 근절방안 요구
 -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서해지방청-황발해어정국간 정례회의 등 국제회의시 불법조업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 중국어선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해양경찰 주재관 파견 추진
 - * 주중대사관(북경), 주칭다오총영사관(청도) 대상

나.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광역경비체계 정착

[1] 독도 및 이어도 위기대응역량 확충

- ① 해·공 입체적 경비활동 강화를 위한 대형함정, 항공기 등 전력 증강
 - 독도·이어도 등 광역해역에서의 완벽한 해양경비체계 구축에 필요한 대형함정 등 소요장비 보강
 - * 대형함정 4척(3000톤급 2, 1500톤급 1, 1000톤급 1), 고정익 항공기 2대 보강
 -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보호 등 제주 남방해역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제주지방청 신설(3월) 및 이어도해역 대형함정 1척 전담 배치
- ② 비군사적 분쟁 상황 발생에 대비한 현장 대응능력 강화
 - 군·관 등 유관기관 간 위기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워크숍, 현장 순회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위기대응능력 향상 대책 추진

[2] 해양관할권 확보 및 효율적 자원관리 기반 구축

- ① 해양주권 수호·해양자원 보호를 위한 「해양경비법」 시행
 - 새로운 해양경비법 제정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 및 ‘해양경비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기반 마련
 - * 해양경비법 : 해상검문검색, 추적·나포, 무기사용 등 5장 22개 조문으로 구성

② 해양관할권 확보 및 배타적 경제수역 자원관리 역할 주력

- 해양관할의 전략적 관리를 위한 EEZ 해상·항공 예방순찰 확대
- 영토·해양 학술세미나 개최 등 ‘해양경계·자원·정보’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해양영토문제 공동대응
 - * 신조 훈련함(3000톤급, 6월 배치) 활용, 전문가 초청강연 및 워크숍 등 개최

다. 해양안보역량 강화 등 위기관리 능력 제고

(1) 동·서해 접적해역 해상치안 및 통합방위역량 제고

① 접적해역 경비함정 자위권 강화 및 해상치안 시설·장비 확충

- 경비함정 무장 강화(20mm발칸포 → 40mm자동포)·생존훈련 실시 등 경비세력 자위권을 강화하고, 서해5도 방호파출소 3개소 신축
 - * 무장 강화 :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3000톤급 1척, 500톤급 3척 등 4척
- 다수의 부상자 등 응급환자 및 출도민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전담 수송세력 보강(대형공기부양정 약 200인승 1척, 대형헬기 1대)

②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 제고 등 비상대비태세 확립

- 인천·속초 전술지휘통제망 운용 강화, 합동훈련 및 전술협조회의 확대 등 군과 실시간 대북 정보 공유 및 군·경 협조체계 강화
- 실전적 충무·화랑훈련 참가, 을지연습 실시로 통합방위태세 확립

(2) 해양 대테러 역량 강화 및 해상경호임무 완벽 수행

① PSI 수행역량 강화 및 해상 대테러 등 특수임무 수행능력 향상

- PSI OEG(운영전문가 그룹) 국가가 참여하는 해상차단훈련 실시
 - * 아태 지역 PSI 선도국인 일본(해상보안청)과 합동훈련 실시, 선진 매뉴얼 습득

- 해상 대테러 전술 보강 및 장비도입, 국내·외 대테러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합동훈련 강화로 **현장 중심의 대테러 활동 전개**

*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과 유대 강화 및 유관기관간 합동훈련 내실화

②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 지원

- 소형 항포구를 통한 밀입국 차단 등 전국단위 경호안전활동 추진으로 경호 위해요소 사전 제거 주력

* 원전, 저유소 등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안전활동 강화

- ‘핵안보정상회의’ 대비 인천공항, 아라뱃길 및 한강에서 집중 경호활동 실시

- ‘세계박람회’ 관련 해상수변 안전관리, 인명구조, 해상치안유지 및 대테러활동 실시

(3) 해안경계임무 전환(軍→해경) 대비 인수준비 철저

① 해안경계임무 전환 시범적용을 위한 대응 기반 마련

- 가칭 「해안경계임무 전환 준비단」을 구성 '13년 시범적용계획 수립
- 시범시행을 위한 적용지역 안보환경·여건 등 감안, 최적의 조직 설계 및 소요인력·예산안 검토

② 원활한 해안경계임무 수행체계 구축

- 현행 군·경찰의 규정 등을 비교·검토하여 우리청 실정에 맞게 최적화하여 해안경계임무 관련 훈련 및 매뉴얼 제정
- 작전체계, 조직·예산, 장비·시스템, 연차별 추진계획 등 「해안경계임무 전환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추진

* 신규 자원(R/S 등) 및 기존 자원(함정·항공기 등)을 통합한 운용개념 도입

가. 수색구조역량 강화로 해양사고 대응체계 개선

(1) 신속한 해양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응역량 강화

① 해양사고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구조체계 정비

- 122구조대 직무훈련 강화, 장비 개선으로 효과적 업무수행 기반 마련
- 대형 해양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중수심(40m) 이상의 침몰사고 대응을 위한 「특수구조대테러단」 신설, 심해잠수 대응능력 유지

② 해양 응급의료체계 개선 및 어선 실시간 위치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경비함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에 따른 자체 응급구조사 양성방안을 마련하고, 함정에 응급구조사를 배치하여 해상구급대 운영
 - * '12년도 응급의료기금 56.3억원 확보 등 연차적 사업범위 확대
- 해양경비안전망 조기 정착을 위한 관계부서·기관간 협의체 구성

(2) 연안·원해해역 안전관리체계 정립

① 민·관 수난구호 공조체계 강화 및 안전관리 법적근거 정립

- 신속한 수색구조를 위한 지역 민간해양구조대와의 협력 강화와 민간구조대원 지원방안 마련
 - ※ 무상보험 가입, 수당 지급, 수난구호 우수대원 선발 등 인센티브 제공
- 해안가, 방파제, 갯바위 등에서의 적극적인 사고 예방활동 전개를 위한 가칭 「연안안전관리법」 제정 추진
 - * 음주 및 기상불량시 입욕 통제, 4륜 오토바이 운행 제한, 수영금지 구역 설정 등

② 해양사고 예방·대응 능력 제고

- 연안해역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용 CCTV 확대 및 시스템 개선
- 시기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해양사고 대비·대응계획 수립과 해양사고 예방·대응시스템 운영 강화로 해양재난 방지
- 유관기관과 대규모 현장 합동 수색·구조훈련 실시 및 수색구조 기반 조성을 위한 「한국해양구조협회」 설립 추진

(3) 국제 수색구조 협력체계 강화

① 국가간 수색구조 협력체계 강화로 우리 선박의 안전 확보

- 러시아 등 원양어선 조업해역 인근 국가와 수색구조협정 체결, 우리 원양어선 및 국제항행선박 보호
- 중·일·러 및 북태평양 해상치안기관간 합동훈련·회의 지속 추진

② 해상 조난·안전 통신시스템 개선으로 선제적 안전관리 추진

- EPIRB 오발신을 감소, 노후장비 교체, 운용 선진화 등 통신망 개선
- 국제 해양안전 및 수색구조 규범·체계 변화에 적극 대응

나. 체계적 해상교통관리로 안전한 바닷길 확보

(1)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선진화

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현장관리 강화로 체계적 안전관리

- 계절별, 해역별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제도 강화
 - *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3천만명, 사고 증가 추세('10년 7건 → '11년 10월 12건)
- 모바일 오피스 실시간 조회 등 IT를 통한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

② 제도 개선 및 단속·예방활동 강화로 건전한 해상교통질서 확립

- 높아진 안전관리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법령 정비 및 매뉴얼 개편
 - *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 추진, 여객선 및 유·도선 안전관리 매뉴얼 정비
- 3대 해상교통질서 저해사범(음주운항, 정원초과, 과속) 연중 단속 및 해양종사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계도활동 지속 전개

[2] 해상교통관제(VTS) 활성화로 통항선박 항행안전 확보

① 해상교통관제시스템 확대 구축으로 관제 사각지대 해소

- 여수 연안VTS 개국('12.12월) 및 통영센타 공사 발주('13.12월 개국)
 - * 해상교통 최대 밀집지역인 서·남해안(목포~마산, 114해리) 광역관제시스템 구축
- 인천-충남 대산권(인천~대산까지 38해리)에 연안 VTS 구축 추진
 - * '07. 12. 허베이 스피리트호 해양오염사고 발생 등 사고취약 해역

② 항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VTS 운영체계 마련

- 관제구역 순찰, 단속 등 현장성 강화를 위한 VTS 순찰정 도입 및 연안 VTS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추진
- 진도·여수·통영권역 연안 VTS의 통항선박 정보연계망 구현
 - * 관제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근 센터간 입·출항 선박의 정보를 공유

다. 수상레저 및 해수욕장 안전관리체계 정립

[1] 「수상레저안전협회」 조기 정착 및 규제완화 추진

① 협회 출범에 따른 조직 정비 및 안전관리 강화

- 면허·교육·검사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조직·시설 마련과 임원구성 등 설립 제반사항 검토 및 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

- 내·해수면 수상레저사업장 전방위 현장점검으로 사고 요인 제거
- 경인아라뱃길 관련 수상레저 동향 분석 및 내수면 안전관리 보장

②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한 불편사항 개선

-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장비 착용의무를 활동자 입장에서 개선하고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교육이수 프로그램 일원화
- 수상레저조종면허 시험을 통한 면허 취득을 교육기관의 과정(2급·요트조종) 이수만으로도 면허취득이 가능토록 추진

[2] 해수욕장 안전관리 확충

① 안전관리요원의 인명구조 및 장비 운용 역량 강화

- 수상인명구조, 응급구조사 등 안전 분야 자격증 취득 확대와 수상 오토바이 장비전담인력 지정 등 전문화 교육 시행
- 소규모 해수욕장엔 명예안전요원, 지자체 고용 안전요원을 고정 배치하고 여경구조대 등 특화 시스템 확대 운용
- 수상안전부표 표준화사업 추진 및 해수욕장별로 지자체와 협력 구조 인력·장비 현장 맞춤식으로 개선

* 표준부표 : '10년 61개 해수욕장, 726개 → '11년 68개 해수욕장, 1,288개 확대

② 수요자 중심의 해수욕장 안전관리

- 성범죄 예방교육단속 실시, 민간 통역요원 운영, 미아 방지용 팔찌 배부 및 응급처치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이안류 발생, 해파리 출몰 대비 유관 전문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국립해양조사원 이안류 예보시스템, 국립수산물과학원 해파리 정보 활용

3

법질서가 확립된 평온한 해양치안질서 유지

가. 공정사회 실현에 수사역량 집중

(1) 권력·토착·기업형 비리 척결 주력

① 사회지도층·공직자 비리 및 사이버기자 갈취 행위 등 단속 주력

- 지자체·단체장 비리, 사이버기자 금품갈취, 대형 국책사업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 등 민·관 유착행위 집중 단속
- 은밀하게 이뤄지는 권력·토착 비리 단속을 위해 범죄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제공자에 대해서는 검거자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

② 수사역량 지속 강화로 해양·수산업체 기업형 비리 척결

- 조선소·해운업체 비자금 조성, 리베이트 수수 및 해양·수산 단체 공금 횡령 등 기업형 토착비리 중점 단속방안 마련

(2)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생계형 범죄자 계도위주 단속

①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근절 예방 및 민생침해범죄 단속활동 강화

- 어선·양식장·도서지역 염전 및 직업소개소 등 인권유린 우범요소 주기적 예방점검 및 실종아동 및 장애인 발견을 위한 일제수색 확대
- 선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임금착취, 선원폭행, 해상절도 등 생계 침해형 범죄 근절을 위한 범죄정보 수집 및 단속 강화

② 획일적 특별단속에서 탈피, 경미사범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주력

- 각종 특별단속 계획시, 생계형 범죄단속 기준을 설정하여 국민 친화적 수사활동 전개
- 계도장 발부 유형 12개 선정, 계도 활성화로 예방과 단속 병행

(3) 마약류 단속·수사역량 강화

① 마약수사 경찰관 전문성 강화를 통한 마약수사 활성화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단기발령 억제 및 마약수사 전문교육 확대, 국내·외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 밀반입·공급·유통 Line 수사
- 마약류 밀반입·판매 등 중요사범 집중 단속 및 마약수사 활성화를 위한 BSC 지표 개정

② 경미사범에 대해서는 예방활동 전개 및 준법의식 고취

- 단순 투약 및 양귀비 재배 근절을 위해 홍보포스터 제작·배포 등 단속에서 예방위주로 지속적인 의식전환 유도
- 신고포상금제(최대 1,000만원) 홍보 등을 통해 신고체계 활성화

나. 인권 보호와 수사의 공정성 제고

(1) 인권보호 시스템 지속 강화

①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수사행정 구현

- 인권 전문강사 초빙교육 정례화 및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확대
* 사례 공유, 피해자 구제절차 안내, 의료상담 및 보건서비스 등 연계 지원
- 수사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로 인권침해 소지 사전 제거 및 인권위주 수사 활동으로 대국민 만족도 제고

② 수사과정에서의 공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문수사관 양성

- 수사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양경찰 고유의 수사분야, 자격·요건 선정하여 전문수사관 선발 운영
- 수사 인력관리를 위해 인사운영규칙 개정, 수사전담요원 경진대회, 수사간부 지휘역량 평가 등 수사역량강화 액션 플랜 지속 추진

[2] 과학수사 역량 제고

① 특화된 과학수사 분야 개척

- 해상변사자 검시, 선박 화재감식 등 해양범죄 특성에 부합하는 감식기법 발굴 개발
- 플랑크톤 ‘로드맵’ 작성을 위한 서남해역 변사기록 분포도 작성

② 지방청 과학수사팀 직제화 반영 및 일선서 과학수사요원 전종화 추진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

다. 갈등 해소를 위한 민생정보활동 주력

[1] 정책 수용도 향상을 위한 정책정보 발굴 강화

□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의 정책정보 발굴 주력 및 수집영역 다변화

- 경기 침체로 어려운 바다가족의 민심 수렴, 정책제언 발굴로 공정사회 구현에 적극 동참하고 정기적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하여 국가시책 지원
- 수산분야 위주의 정책정보 수집에서 **항만·환경·문화** 등으로 전환

[2] 주요 집단민원 체계적 관리

① 선거철에 편승한 집단민원 증가에 대비 예방정보활동 강화

- 지역별 주요 현안 관련 불만 동향 파악 및 예방·순화 주력

② 합법적인 육상집회는 보장하되, 해상불법행동은 엄정 대처

- 집단민원에 대한 정기적인 진행사항 체크 등 DB 구축·관리
 - * 서귀포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등 총 66건의 집단민원 관리 중
- 집단민원요인 사전 제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해소

라. 외사범죄 대응력 제고와 국제공조체계 강화

(1) 외국인 범죄 예방 및 단속

- 외국인 권익 보호 및 외국인범죄 사전예방활동 강화
 - 해양·수산 분야 외국인 동향 관리 및 외국인 범죄실태 분석
 - 임금체불, 학대, 인신매매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 사범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

(2) 외사 수사영역 확대 및 다변화

- ① 외사 수사와 정보를 동시 고려하는 통합적 외사활동 실시
 - ‘외사정보시스템’을 통한 사건보고 및 범죄유형과 수사노하우에 대한 체계적 분석·관리로 수사기법 개선
- ② 변화된 정책환경에 맞는 신종범죄 발굴로 新 외사영역 개척
 - 지역별 테마선정 기획수사 강화, 산업기밀 및 첨단 IT 기술범죄 차단 등 신종 범죄 발굴·개척

(3) 미래지향적 글로벌 협력 전개

- ① 국적선 안전운항을 위한 예방협력 네트워크 확대
 - 북극항로 진출에 대비한 미주·유럽지역 국가와 협력체계 구축, 동남아·아프리카 국가와 해적피해 대응 공조체계 마련
- ② 저개발국 및 신흥 해상치안기관 지원사업 확대
 - 퇴역 경비함정 지원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개발, 아시아·아프리카 해상치안 공무원 초청연수 규모 확대

가. 국가방제시스템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1) 방제 총괄지휘체계 강화

- ① 재난적 사고의 방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가긴급방제계획 수정·보완
 - 해안방제를 위한 인력·장비 지원, 방제평가 기준 등을 반영하고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실행력 평가 실시
- ② 해양환경관리공단 역할 재정립 및 방제기술지원협의회 활성화
 - 공단의 방제대응계획 등 긴급 방제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와 민간부문 방제업무 육성 및 지원방안 마련
 -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제조치 결과 평가 및 업무개선 협의회 개최로 방제기술 지원, 정보교류 등 방제협력체계 구축

(2) 방제역량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 ① 방제 장비·자재의 효율적 관리와 과학적 방제지원체계 구축
 - 국가 방제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방제자원관리시스템 개발과 방제조치기관 간의 방제정보 공유로 해안방제 실행력 향상
 - 해상유출유 확산예측 시스템 고도화, 해안오염평가제도 본격 시행 등 과학적인 방제조치로 오염피해 최소화
- ② 방제비용 선지급 제도 도입과 보상절차 업무 매뉴얼 개발
 - 선지급제도 정착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및 보상절차 마련

[3] 국가간 교류 확대 증대로 방제협력 강화

① 북서태평양 인접 국가간 방제협력체계 활성화

- 한중 합동 방제훈련 개최 및 NOWPAP 방제활동센터 실무당국자 회의 참가 등 방제협력 실행력 강화방안 마련

② 선진 방제기술 공유를 위한 국제회의 참가 및 방제정보 교류회의 개최

- IMO 해양오염방제 전문가회의 및 국제기름오염학회('12.3월) 참가

나. 해양오염사고 신속 대응태세 유지

[1] 방제 장비·자재 확보 및 효율적 배치

① 방제정 건조 등 방제장비·자재 보강

- 해상기상, 수심 등 해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제정을 건조하고 유회수기, 오일펜스 등 방제장비 확보

* 대형 다목적(교육·훈련 등) 방제선 배치('12.4월), 10톤급 방제작업선 3척 건조

- 지방자치단체 해안방제 지원을 위한 방제장비·자재 대폭 증강

* 비치크리너 등 해안방제기기 31대 배치, 개인보호장구 13,000세트 비축

② 해역별 오염사고 위험도 평가 및 방제자원 배치 조정

- 선박 통항량, 유조선의 크기, 오염사고 이력 등을 고려하여 가상 기름 유출량을 산정하고 지역별 취약등급을 분류하여 관리

- 기름유출사고에 대응하는 기관별 자원현황 실태조사 실시·분석 후 적정 방제자원의 증장기 확보계획 마련

* 해경, 지자체 등 국가부문과 해양환경관리공단, 방제업체 등 공공민간부문으로 구분

[2] 민·관 방제협력체계 강화 및 방제전문가 양성

[1] 신속 대응을 위한 민간방제세력 협력체계 강화

- 어촌계 자율방제대 운영과 공단, 방제업체, 구난업체, 유조선사 등과 방제지원 협약 체결 및 다양한 상황 대비 방제훈련 실시
 - * 민·관합동 방제훈련, 해안방제훈련, HNS 방제훈련 등 총 60회 실시

[2] 방제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 대응능력 경진대회 활성화 및 전문기능 보유자 ‘기장(merit badges)’ 제도 신설

- * 해양경찰학교 교육과정 및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 확대

다. 위험·유해물질(HNS) 및 폐기물 해양배출 관리 강화

[1] 선진형 위험·유해물질 사고대응능력 강화

[1] HNS 사고대응 체계화 및 훈련 실행력 확보

- 물질별 위험성 평가를 통한 주요 항만별 사고대응 시나리오 개발과 안전하고 체계적인 훈련시스템 정착을 위한 훈련 평가제도 도입

[2] HNS 사고대응 정보, 스마트 지원체계 구축

- 중점관리대상물질(68종) 대응 정보 공유를 위한 스마트폰용 어플 개발
Facebook을 연계한 정보공유 및 물질별 전문가 지원체계 구축
- HNS 장비 사용·유지관리 등 스마트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QR (Quick Response)코드 제작으로 장비 사용 활성화

[2] 해양투기 폐기물 감축관리로 해양환경 개선

[1] 폐기물 해양투기 적정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점검반 구성·운영 업체별, 배출해역별 적정 허용량 배정으로 배출해역 환경관리 개선

② 해양배출행위 점검관리 강화로 불법배출 원천 차단

- 하수오니, 가축분뇨 등 해양배출 금지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 DMS, CCTV 등을 활용하여 폐기물 운반차량 및 배출선박 상시 점검

라.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환경 보호

(1) Clean Sea Korea를 통한 해양환경 의식 개선

① 「Clean Sea 플랫폼」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 ‘Green 해안가 만들기 운동’, 그린 도우미 선정 등 해양환경 보전과 국민 참여 유도를 위한 ‘Clean Sea Point’ 제도 도입 운영
 - * 해양환경 보전활동 참여자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 누적 점수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② 해양환경보전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전의식 개선

- 바다사랑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 및 해양사진대전 개최로 대국민 해양환경 보전의식 확산
- 저소득층·다문화가정 자녀 등이 참여하는 체험형 여름해양캠프 운영

(2) 해양오염원 효율적 관리로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

① 해양오염원 체계적 관리 및 예방활동 강화

- 유창청소업 및 선박해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
 - * 오염물질 수거확인증 운영체계 개선, 선박해체 기준 정립 등
- 해양환경사범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 및 예방활동 강화로 해양오염 억제
 - * 노후선박 및 사고 빈발지역 예방활동 강화, '12 여수 Expo 대비 집중단속 실시

② 원인불명 해양오염사고 행위자 색출 및 해양환경감시원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강화

- * 대량 원인불명 오염사고시 광역조사팀 구성·운영

가. 미래를 준비하는 선진 조직문화 창출

(1) 국가시책 지속 추진과 발전적 미래전략 시행

① 국가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로 실행력 제고

- 공정사회 등 국가시책 분기별 점검 및 성과 분석·환류

- * 전문가 평가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 내·외부 평가 병행

- 그린오피스 건축, 경비함정 하이브리드 추진체계 및 LED조명 도입, 유류절약 실적과 성과지표 연계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 생활화

② 창조적인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플랫폼 전략』 추진

- 여러 기관·단체들에게 해양활동 기반(Platform)이 될 수 있는 우리청의 인적·물적 자원을 개방·지원하여 대국민 서비스 개선 추구

- * 항공기 운용 정부기관간 「융합행정」 추진 등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

- 폐쇄적 경쟁위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공생과 공존의 발전전략 제시

(2) 자발적 참여를 통한 조직문화 개선

□ 자발적 변화관리 유도로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 기존의 딱딱한 제안, 제도개선이 아닌 자발적 참여 도모

- * 아이디어 경매대회 등 쉽고 재미있는(Easy & Fun) 제안문화 조성

- 업무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웃차림, IT정보, 매너, 유머화술 등)의 정보공유 등 트렌드를 반영한 지식행정의 재도약

나. 참여와 공감의 인사행정 실현

(1) 조직내 활력 부여를 위한 공정한 인사정책 추진

① 법령·제도 개선을 통한 조직 활성화

- 일반직공무원 경찰관 전환 및 간부후보생, 순경특채 시험과목 개선 등 자체 인사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맞춤형 인사제도 정착
- 경찰관 신규채용 공고시 원소속 배정인원 사전예고제 도입으로 원소속제도의 조기정착 및 신입경찰관의 불만요인 해소

② 해양경찰학교의 여수 이전에 맞춰 교육·연구분야 프레임 대전환

- 해양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해양 분야 전문노하우 등을 공유하기 위해 대외 개방형 교육과정 발굴
- 행안부·교과부 주관 ‘인재개발 우수기관’ 재인증 추진 및 해양경찰 학교 여수 이전에 맞춰 명칭·교육체계 개선, 위상 재정립

(2) 인적역량 증대를 위한 진화형 인재관리체계 구축

① 인재 충원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 채용 분야별 외부전문가 인력 Pool 구성으로 평가의 공정성 확보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공직채용박람회 및 대학 채용설명회 참가

② CDP를 통한 체계적 인재관리 기반 마련

- 전문역량기반의 통합인적자원관리시스템 고도화와 CDP와 연계된 전문교육을 통해 성과목표인 미래지향적 인사관리 추진

* 교육훈련 및 원소속 관리 등 인사시스템 통합과 보직관리 기능 확대

다. 장비관리의 탄력적 대응체계 마련

(1) 해상치안장비 연구개발 및 안정적 확보

- ① 해상업무 수행의 효율성·안전성을 위한 미래형 치안장비 연구
 - 해상치안장비의 효율성 관련 경비함정 구조의 단계별 디자인 연구
 - * 선진국 함정구조 비교연구 및 선호도 조사, 전문가 세미나 개최
 - 경비함정의 중요 치안장비별 운용자 만족도 조사 및 개선사항 발굴
- ② 함정·항공기 적기 도입을 위한 공정관리 및 절차 개선
 - 경비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적기 계약 및 공정관리 추진
 - * 경비함정 59척, 항공기 2대 등 사업금액 2,242억원
 - 조달청, 방위사업청과 장비도입 절차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2) 장비 운용효율 향상을 위한 현장지원체계 보강

- ① 해상치안수요에 대응한 탄력적 정비 및 안정적 복구체계 구축
 - 지역별·계절별 치안특성 고려 수리일정 조정, 정비창 수리능력 한계 극복 및 해군 수리의존도 감소를 위한 정비창 확대 추진
 - * 서·남해안 경비세력 : 불법외국어선 대응을 위한 동절기 수리 지양
- ② 정보화 기반 확장 및 해상치안업무 서비스 선진화
 -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정보기술 아키텍처 활성화 등으로 효과적인 정보화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우리청 고유 모바일 서비스 개발·제공
 - * 스마트폰과 휴대용 지문인식기, QR(Quick Response)코드 등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라.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1) 국민편의 민원서비스 제공

①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민원서비스 운영

- 소외계층이 민원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구술민원신청제’ 도입
 - * 장애인·고령자 등 민원신청서를 구술에 의하여 담당자가 신청서 작성
- 범죄신고, 채용서류 접수, 민원안내 등 언제, 어디서나 One-stop체계 강화

②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등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

-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고 정보공개 접수권한 위임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2) 열심히 일하는 엄정한 공직분위기 정착

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테마별 공직복무 점검활동 강화

- 지역별·관서별·시기별 취약업무 선정, 선제적 감찰·감사활동 강화로 비위유발 요인 제거 등 차별화된 부패위험 관리
- 단편적 복무점검은 지양하고 ‘잘한 업무’에 대한 보상 확대 등 일하는 분위기 확산으로 능동적 근무분위기 조성

② 반부패 인프라 확산을 통한 청렴도 우수기관 재도약

- 부패위험(Red Zone) 관리 강화로 청탁, 상납·접대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옴부즈만 활성화로 부패 감시 확대
- 의무위반자 잠재성 진단·치료 활성화, 비리 신고시스템(Help-Line) 지속 운영으로 부패요인 제거 노력을 강화하여 청렴도 향상 추진

별첨 1 Action Plan (분기별 주요과제 추진일정)

1/4분기

추진과제	조치사항	시한
▪독도·이어도 EEZ 해양주권 수호	'12년 해상 경비계획 수립	'12.1
▪해안경계임무 전환 사전 준비	해안경계임무 전환 준비단 구성	'12.1
▪원해해역 안전관리체계 강화	'12년 수난대비 계획 수립	'12.1
▪중국 해상법집행기관과의 협력 강화	해감총대와 지방청간 연락창구 개설	'12.2
▪불법외국어선 대응 및 외교적 역할 강화	불법외국어선 단속 현장점검	'12.2
▪연안해역 안전관리체계 강화	특수구조대테러단 신설	'12.2
▪핵안보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인천공항, 한강 등 경호활동	'12.3
▪불법외국어선대응 및 외교적 역할 강화	주요정책 설문조사 실시	'12.3
▪해양산업범죄에 대한 수사영역 확대	해양산업범죄 등 특별단속	'12.3
▪검찰과 협조, 불법 외국어선 사법처리 강화	공무집행방해 협의 적극 적용	'12.3
▪노후대체 함정 배치	1000톤급 경비함 2척 배치 운용	'12.3
▪방제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해안오염평가팀 운영규칙 제정	'12.3

2/4분기

추진과제	조치사항	시한
▪연안해역 안전관리체계 강화	민간자율구조대 워크숍 실시	'12.4
▪국제 수색구조 협력 체계 강화	한·러 합동훈련 실무회의	'12.4
▪해양오염사고 신속대응태세 유지	HNS 방제훈련 실시	'12.4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 지원	안전관리 인력 및 장비 배치	'12.5
▪연안해역 안전관리체계 강화	구조대 현지 적응훈련계획 수립	'12.5
▪선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인권유린 특별단속, 일제수색 실시	'12.5
▪국내외 방제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한·중 합동 방제훈련 실시	'12.5
▪해양환경보전 프로그램 운영	그림그리기대회, 사진대전, 전국일제 바다정화운동	'12.5
▪독도·이어도 EEZ 해양 주권 수호	해양자원정보관련 유관기관 워크숍	'12.6
▪불법외국어선대응 및 외교적 역할 강화	중국어선 변형 전술 발표회	'12.6
▪해안경계임무 전환 사전준비	해안경계임무 전환 연구용역	'12.6
▪해수욕장 안전관리	해수욕장별 적응훈련실시	'12.6

3/4분기

추진과제	조치사항	시한
▪독도·이어도 EEZ 해양주권 수호	독도 우발상황대비 차단훈련	'12.7
▪해수욕장 안전관리	안전요원·구조장비 배치	'12.7
▪국제 수색구조 협력체계 강화	한·러 SAR협정 체결	'12.7
▪3분기 국제성 범죄 기획 수사	관서별 테마선정 기획수사	'12.7
▪해양오염사고 신속대응태세 유지	민·관 합동 방제훈련	'12.7
▪국제 수색구조 협력체계 강화	북태평양 해상치안기관 합동훈련	'12.8
▪저탄소 녹색성장형 하이브리드 함정 도입	3000톤급 경비함 1척 도입	'12.8
▪불법외국어선대응 및 외교적 역할 강화	중국어선 관련 외국치안기관간 회의	'12.9
▪독도·이어도 EEZ 해양 주권 수호	EEZ 수호 합동 훈련 실시	'12.9
▪연안해역 안전관리체계 강화	의료시스템 완료 및 응급구조사 배치	'12.9
▪국제 수색구조 협력 체계 강화	한·러 합동훈련 개최	'12.9
▪외국인 피해자, 피의자 권익 보호	통역인 Pool 확보	'12.9
▪국내·외 방제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제기술지원협의회 회의 개최	'12.9
▪대테러 대응역량 강화	특공대 전술평가대회	'12.9
▪해양오염원 체계적 관리 및 예방활동 강화	하반기 해양오염 집중단속	'12.9

4/4분기

추진과제	조치사항	시한
▪불법외국어선대응 및 외교적 역할 강화	중국어선 성어기 특별단속	'12.10
▪연안해역 안전관리체계 강화	한국해양구조협회 설립	'12.10
▪원해해역 안전관리체계 강화	동절기 해양사고 대응계획 수립	'12.10
▪국제 수색구조 협력 체계 강화	제49차 Cospas-Sarsat 이사회	'12.10
▪국제 수색구조 협력 체계 강화	한중일러 수색구조 실무회의 참석	'12.10
▪외국인 동향 관리 강화	해양수산 외국인 범죄실태 분석	'12.10
▪PSI 해상차단 역량 강화	PSI 국제차단 훈련 실시	'12.11
▪국제 수색구조 협력 체계 강화	한·일 수색구조 합동훈련 실시	'12.11
▪해양오염사고 신속대응태세 유지	해안 및 방제대책본부운영 훈련	'12.11
▪체계적인 해상교통관리	여수 연안VTS 개국	'12.12
▪원해해역 안전관리체계 강화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개최	'12.12
▪전문 수사경찰관 선정	인증서, 격려금 등 인센티브 부여	'12.12
▪선진 조함체계 기반 구축	함정 설계·건조 표준규격 개발	'12.12
▪헬기 응급의료 서비스 확대 설치	헬기(AS-565) 2대에 추가 설치	'12.12

별첨 2 2011년 업무계획 이행실적

완벽한 해양주권 수호, 선진 해양안전망 구축

추진과제	주요 조치사항
○ 빈틈없는 해양주권 수호로 해양영토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단속역량 강화 종합대책 수립(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역량 강화 T/F운영 전술 및 장비 현황 및 분석 개성 ○ 독도 수호 합동 훈련 실시 (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해지방청, 동해·포항해양경찰서, 독도경비대, 해군1함대사 ○ 불법외국어선 단속 매뉴얼 발간(7.6), 중국어선 439척 나포(11월) ○ 울릉도 사동항 설계 협의회 참여 (7.18)
○ 해양안보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경비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청 군사지침서 「해양경찰 작전계획」 작성(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 국지도발침투, 전시상황 등 국가비상사태 대응 계획 ○ 北 국지도발 대응 매뉴얼 작성(4.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군 침투도발, 서북해역 우발사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한-싱가포르 PSI 선박검색 합동훈련 실시('11.7) ○ 해안보 경호안전기획단(단장 경비안전국장) 구성 운영('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호안전기획단 → 해경작전본부 승격('11.12.1일자) ○ 국제해상치안전퍼런스 공동개최기관 확대 개최('11.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해경청, 동북아역사재단, KMI) 기관 → 4개(KORDI 참가) 기관
○ 안전관리체계 강화로 바다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비안전망 관련 어선법 개정안 공포('11.7) ○ 수난구호법 전부 개정안,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10.26) ○ 동해·부산·군산해경서, 안전한국훈련 실시(5.2~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청 본청 및 부산해경서 훈련 우수기관 선정
○ 해상교통 안전관리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선박 시기별 맞춤형 「집중 안전관리제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추석, 봄철·농무기(3월), 여름철(6월), 동절기(12월) ○ 차별화된 VTS운영 및 확대구축으로 연안해역 안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예방 매뉴얼 제작 및 관제구역 세분화, 광역VTS 구축 전략 마련
○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 등 수상레저 활성화 주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 협력으로 취약시기 등 해수욕장 종합 안전관리체계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욕장 융합행정 시범실시(영덕 고래불, 완도 명사십리, 서천 춘장대) 민간 인명구조 자격증 취득교육 실시(855명 취득) ○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설립의 근거마련(6.15) 및 출범(9.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회장, 이사, 감사 등 임원 선출 및 정관, 운영규정 등 의결
○ 경인 아라뱃길 및 한강에서 체계적인 안전관리 업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 수상파출소 부지(210평) 및 예산(20억) 확보('10.4~'11.10) ○ 김포·청라여의 파출소 신축 및 인력·장비 투입(11.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관 35명, 순찰정 등 10척 투입 안전관리 업무 실시 ○ 퇴역함(1002함) 전시 및 해양안전체험관 부지(825㎡) 확보

해양치안 확립, 깨끗한 바다 보전, 조직문화 개선

추진과제	주요 조치사항
○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한 수사역량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부정 및 권력형 토착비리 특별단속 지속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실적('09년~'11년) : 총 501건 1,873명 검거(구속 61명) ○ 인권유린 및 면세유 등 시기별·테마별 특별단속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실적('08년~'11년) : 총 8,288건 9,677명 검거(구속 236명)
○ 인권보장과 증거위주의 공정한 수사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인 권리헌장 제정 및 게시물 제작·배부('11. 4.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인 인권보장 10개 항목 선정·제정 및 게시물 4종 48매 배부 ○ 범죄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11. 4.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7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18개 병·의료원 협약 체결 ○ 플랑크톤 로드맵 중장기 계획 수립('11. 3. 31)
○ 국제범죄 강력 대응 및 국내외 공조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 국제성 범죄 기획수사 실시(3·6·9·12월) ○ 일본 방사능 관련 수입산 농수산물 불법유통 단속(4·5월)
○ 다변화하는 해양재난 대응을 위한 방제 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WPAP 통신훈련(2월, 5월), 실무당국자회의(6월) 개최 ○ HNS 사고대응 관계 기관·업체와 지원·협력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개해경서 95개 유관기관 및 단·업체 190명 참석(8월) ○ 울산·여수지역 해안방제지원시스템 구축(12월)
○ 재난적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제능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마별 방제훈련 실시(3 ~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합동 15회, 응급조치 15회, HNS 9회, 도상훈련 28회 ○ 울산 방제비축기지 준공·운영(4월) ○ 150톤급 방제정 2척 건조·배치(10월 /태안·울산) ○ 해양오염사고 273건 발생, 215건 방제작업(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제율 : 69.3%('09년)→75.1%('10년)→78.7%('11.11) ○ 10톤급 소형방제 작업선 3척 건조·배치(12월)
○ 국민 참여를 통한 능동적 해양오염 예방활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 생활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실시(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00개소에 쓰레기 분리수거대 설치, 1,357톤 수거 ○ 그림그리기대회, 해양사진대전 개최(4 ~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대회 13,876명 / 사진대전 4,790명 참여 ○ 민·관 네트워크 기반으로 전국 해상정화운동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5월 및 9월 등 6회 실시, 해상쓰레기 1,198톤 수거
○ 창의적이고 투명한 성과주의 조직문화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국가시책 과제 세부평가 지침 수립('11.4) ○ 공정사회, 그린오션 T/F 회의개최(분기별) ○ 객관적인 인사를 위한 인사운영규칙 개정('11.6.29) ○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총경승진역량평가 시행('11.10.12) ○ 신고자 보호 내부비리 신고시스템(Help Line) 운영(4.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윤리 전문경영기관과 협약 체결(3.30), 부패심리 억제 ○ 의료·심리 등 비위예방·상담 '청렴클리닉' 협약체결(4.29)